

문화주권의 ‘濟州海女’와 해군기지*

사회과학의 관찰과 예측

전경수**

국문요약

나는 사상적 자유가 전제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이 우리 세대가 천착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한다.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된 ‘사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19세기 이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배되고 속박되었던 상황이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수입된 것들을 ‘마라스대’(카더라)의 수준으로 이식해온 점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학문이 존재할 공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판을 목적으로 설정한 관찰과 예측이 준동하고, 그러한 과정을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횡행하는 것은 학문도 삶도 모두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地名과 고유명사의 헤게모니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나는 ‘제주’라는 단어의 포기를 주장하고, 그 대신에 문화주권과 정체성 복권에 관련된 용어로서의 ‘耽羅’를 제안하였다. 동시에 물질에 관련된 키워드인 ‘海女’가 내포하고 있는 植民知의 문제를 제기하여, 토속명에 바탕을 둔 ‘즙수’로 대체할 것도 제안하였다. 植民知의 정체성으로 뿔뿔 뭉쳐진 두 가지 단어들, 즉

* 이 논문은 ‘2011년 제주학회 제36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濟州’와 ‘海女’가 결합된 ‘濟州海女’는 중층적 식민지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는 ‘탐라즘수’라고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섬이 위기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찰 과정과 사실인식을 통해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의 예측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인간사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가역적이다. 내가 여기서 위기의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선행경험에 대한 사실인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상황 즉 양속지배의 오키나와 상황과 같은 위기의 현상이 이 섬에 엄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사기지의 상륙을 기회의 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선 이 섬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측은 가능하다.

주제어: 사회과학, 정체성, 문화주권, 해군기지, ‘탐라즘수’, 중층적 식민주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학회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은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제주학’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고, 필자는 그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먼저 피력하고, 그 입장 위에서 제주학에 대한 관찰과 예측을 전제로 한 실증주의적인 사례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사회과학은 존재하는 것인가? 소위 ‘사회과학’과 소위 ‘인문학’의 경계는 무엇이며,

경계가 있다면, 어디에 존재하는가?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간행된 경우의 하나를 인용한다. 정치학자 김세균 교수는 사회과학의 경향을 “관찰과 예측을 전제로 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과 “사실인식에 기초한 해석과 비판을 목적으로 한 해석학적 비판과학”(김세균 2011: 15)으로 대별하고, 후자를 자신의 제안이라고 전제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대응하고자 한다. 그것은 과학을 포기한 입장으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는 사실(Émile Durkheim이 지목하였던 사실을 말함)에 충실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실과 사실인식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을 하는 입장의 기본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져온 사실과 사실인식에 대한 치밀성은 상당히 수준 미달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선부른 사실인식의 주범은 집단적 이념과 개인적 소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의해서 추동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허상을 발판으로 한 조급한 해석이 비판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념과 소신이 관찰의 단계에서부터 개입가능성이 있고, 다음에는 예측의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관찰과 예측은 사실왜곡을 전제로 하게 되고, 사실왜곡이 전제된 사회과학이란 과학이라는 이름을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러한 사회과학을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학을 우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판이 사실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며, 그러한 비판이 목하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사회운동은 ‘사회과학’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이념과 소신을 앞세운 사회운동이 진행되고

있음도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한 운동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문의 영역을 닦아온 학자라면, 최소한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전제는 사실과 사실인식에 있고, 사실과 사실인식의 앞에서는 한 치라도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자의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할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온 것이 이 땅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의 많은 경험이다. 식민지시기 조선에 도입된 사회과학은 통치를 목적으로 관찰과 예측을 소홀하게 하였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사회과학은 이데올로기의 각축장 속에서 저항과 운동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관찰과 예측을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이 실증적으로 경험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이 땅에서 관찰과 예측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축적한 소위 '사회과학적 결과물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회과학이란 것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내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관찰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기 바라는 심정이다. 그것은 내가 본고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고 있기에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심심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사실은 쉽사리 왜곡될 수 있다. 조작과 외면 그리고 부정에 의해서 사실은 사실인식이란 이름으로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된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적 현상들이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 사실이란 현상은 지극히 유약하다. 그래서 사실이란 현상을 지킴에 있어서는 양심이란 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이란 현상도 지극히 유약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을 논하고 사실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으면, Émile Durkheim이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란 문제를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겠는가? 또한 사실이 곧 바로 사실인식은 아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사실이란 현상에 충실한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이란 현상을 유약하지 않고 강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인식'이란 관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인식'이란 것이 이미 비판을 목적으로 한 사실인식이기 때문에 관찰의 단계에서부터 사실인식은 이미 전제된 비판에 의하여 오염의 존재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면 모두가 구사하는 인지과정의 속성이다. 비판에 의하여 오염된 눈으로 작동시키는 관찰은 이미 실증주의라는 이름이 내포해야 하는 엄밀성을 포기한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오염 과정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회과학자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을 인식하고도 그 과정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관찰과 예측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가 만드는 위장의 탈을 쓰는 결과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문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절차에 들어간다. 학문이라는 장르가 확보해야 하는 엄밀성의 결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입장의 사회과학이라면, 그 사회과학이란 것은 학문의 장르 밖에 존재하는 사회과학이지 학문이란 장르 내에서 논 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비판을 목적으로 하기 전에 대면해야 할 사회과학의 숙명은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제공하는 복잡계의 문제이다. 그 복잡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이 과거 사회과학의 행태였음을 고백하지 않으

면, 우리의 대화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한 복잡계의 문제를 상징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의 창출이 앞으로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석'과 '비판'은 인문학의 전유물이다. 인문학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사회과학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선이며 독선이다.

따라서 '해석'과 '비판'을 기초로 한 해석학적 비판과학을 목적으로 한 사회과학은 인문학의 아류로서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이란 용어의 존재이유에 적실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문은 인문학과 과학의 양대 산맥이면 족한 것이고, 사회과학은 양대 산맥을 넘나드는 일종의 '박쥐'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든 과학이든 과학이란 글자가 붙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엄밀한 '관찰'과 '측정'에 의한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주의가 기초가 되는 경험과학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할 뿐이다.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해석학적 비판과학이 아니라 실증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상의 자유이다. 사상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실증주의라는 것이 과거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하는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분위기 속의 과학이라는 것은 모두 전제정치의 시녀노릇을 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던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터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상적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 선부른 해석학적 비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순이 바뀐 것이다. 사상적 자유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의 경험과학이

산출한 것은 다음 단계에 가능한 '해석'과 '비판'을 흐리게 유도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사상적 자유와 해석학적 비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상적 자유를 선택할 것이다. 사상적 자유의 선택을 저해하는 해석학적 비판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해석학적 비판을 팽개쳐버릴 것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해석학적 비판이라는 것이 사상적 자유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경우이다. 비판의 분위기가 '머저리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설정한다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사상적 자유를 전제하지 않은 비판은 '마이너리티'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다. 해석학적 비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과학자라면,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 사이에 개입될 수 있는 헤게모니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마이너리티'의 사상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되는 사실들이 과연 '사회적 사실'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해석학적 비판을 사회과학의 정수로 간주하는 사상은 위험하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II. '自想'의 '耽羅·濟州學'

지역연구의 발상은 제2차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전쟁구도에서 미국의 행정부와 군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계의 협조로 시작된 것임은 이미 오래전에 밝힌 바 있다(전경수, 1999). 따라서 지역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주의(colonialism)적 아이디어가 배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점령지주의(militarism)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던 지역연구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재발명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 앞에 서 있다. 출발지점에 도사리고 있는 식민지주의와 점령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성찰 없이는 지역연구의 재발명이란 있을 수 없다.

제주학을 생각하고, 제주도에 대한 심층적인 지역연구를 기획하였던 초창기에 우리들은 사실상 이러한 성찰의 기회 없이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에 대한 애착과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과학적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만 결합되어 제주학을 출발시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전에 제주도라는 지역에 뒤집어 씌어진 보다 더 큰 구도의 지정학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반세기가 넘는 제주학의 역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제주학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의 연구를 위한 근본적인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경험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나는 '自想'이라는 나의 신조어를 사용하였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自想이라고 적어 보았다. '그라스대'(카더라)식 학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여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학문은 존재의의가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창의적 사고의 발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것의 결과는 표절이거나 무의미에 그칠 뿐이다. 식민지주의적 그리고 점령지주의적 의도에 종속된 그리고 그러한 종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온 지역연구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구도에 대한 반성 없이

제주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自想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역연구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이 자상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식민주주의적 착종현상들에 대한 반성과 일소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내용이 그러한 반성과 일소 작업의 신호탄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탐라·제주학'이라고 적었다. 그것은 '탐라학'만도 아니고 '제주학'만도 아니다. 양자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다. 식민주주의에 젖어든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도 함께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인식 과정의 첫 단계부터 오류가 개입된다. 내가 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혐오스러움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사실인식 차원의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주의주장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눈앞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역사바로세우기'를 하는 식으로는 허위와 위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활과 인식은 기본적으로 물상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최소한도 구상적인 상황만큼 심도 있게 천착하지 않으면, 그 삶은 물상화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못한 나도 나의 부분이라는 점은 최소한도 인정해야 한다. 애증이 얽힌 현장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愛와 憎의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한쪽에 대해서 외면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제주도라고 일컫는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제 사실인식의 표현으로서 가장 솔직한 것이 '탐라·제주학'이라는 틀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나의 최근 저

서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서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III. 重層的 植民主義와 ‘濟州海女’: 관찰과 사실인식(1)

중층적 식민주의(nested colonialism)라는 용어는 내가 만든 용어이다. 한 지역에 식민지적 지배가 누적적으로 쌓일 경우에, 그러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작한 단어다. 세상을 다니다 보니, 그러한 역사적 질곡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경험을 배경으로 귀납적인 차원에서 제안해 본다.

예를 들면, 고려의 지배 속에 들어간 탐라의 현상은 식민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몽골이 다시 그 위에 들어옴으로서 식민지적 경험이 누적적으로 축적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용어이다. 해외의 또 다른 예로는 파푸아이다. 과거에는 이리안자야라고 불리던 곳인데, 최근에 행정명칭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에 어느날 갑자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대동아전쟁 동안에 일본군의 군정이 진행되다가, 국제연합의 관리하에서 독립이 예정되었던 상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군대가 점령하여 현재에 이르는 곳이다. 그 내부인 티미카에는 현재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광산권을 갖고 독점적인 금광개발을 하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결탁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유사한 삶이 진행되는 곳이 이 세상에는 적지 않다.

현재의 제주도는 1105년(숙종 10년) 육지에 직접 예속되어 고려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으로서 ‘耽羅’는 국호가 아니고 郡의 명칭으로 전락하였다. 고려는 탐라군을 설치한 뒤 관리를 파견해 이 섬을 직접 다스리게 되었다. 그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고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고려가 절묘한 기회를 포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153년(의종 7년)에 군을 현으로 고쳐 14개 현촌을 두었고, 1211년(희종 7년)에 '耽羅'를 '濟州'로 개칭하였다. 한 지역의 오래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강압적인 폭력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 명칭이 엮치락 뒷치락 반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地名 해계모니'에 얽힌 억압과 저항의 역사적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고려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칭을 바꾸었을까? 원은 일본에 대하여 1266년부터 3회의 조공요청 국서를 보낸 바 있고, 카마쿠라 막부는 3회 모두 답신을 거절하였으며, 3회째의 마지막이 1272년도였다. 1271년(원종 12년)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 저항하다가 1273년에 패한 후 제주도는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었다. 1274년 원은 남송군과 몽고군 그리고 고려군으로 구성된 4천 4백 척의 병선을 오도열도 쪽으로 파견하였고, 결과적으로 원의 일본 침공은 실패로 끝났다. 이때 주력부대였던 남송군의 진로로서 제주도가 중요한 기착지가 되었을 것이고,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재확인되었음에 분명하다.

제주도의 중요성을 감안한 원이 제주도의 정치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단안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격상의 절차상 제주도는 원의 직할지가 되면서 제주는 1275년(충렬왕 1년) 탐라라는 지명을 회복하였다. 20년간 탐라라는 과거의 국호가 회복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찰할 수 있다. 원시림의 들판과 오름들은 군마를 키우는 목마장으로, 목마장을 경영하는 몽고인들의 강도 높은 탐라 지배는

궁극적으로 탐라의 문화에 몽고색이 젖어들게 하였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탐라는 1295년(충렬왕 21년) 고려에 환속되어 다시 제주로 부르게 되었다. 원의 제국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등 원나라의 지나친 간섭을 받았던, 고려 충렬왕(1274~1308) 21년(서기 1295년 乙未)에 최서목사(崔瑞牧使)가 부임하여 탐라를 제주로 재차 개명하였다. 원의 직할지로부터 고려의 직할지로 환원된 것이다. 명칭에 얽힌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로서의 고려가 '몽골化'(忠자 왕들의 명칭에서 보듯이)의 정도가 깊어갈수록, 다른 한 편에서는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불어져 나오는 것이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濟州'와 '耽羅'의 두 명칭이 교대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당시 고려 지배층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巫歌 속에서도 '제주'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민간에 이르기까지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관련된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섬 일름을 누계라/제주라 일름을 징것는고?/옛날에/수등리도 삼오성제/매옹이도 삼오성제/삼삼구 아읍성제 솟아나/어깨맞고 잉어맞아/건나온 섬이니/건늘젯제 골쫓제 놓아/제주라 일름징굿디다”(진성기 1991: 674-675). '濟州'란 '건늘젯제 골쫓제' 즉, 물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제주에 대한 육지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증언하는 부분이다. 부연하면, 이 무가의 가사는 최소한도 '耽羅'가 '濟州'로 개명된 이후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정학적 위치는 半島의 육지 즉 고려이다.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濟州'는 '물

건너에 있는 고려의 땅'이라는 말, 즉 '식민지'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연상하여 지명을 '물 건너온 땅'이라고 지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濟州'라는 지명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명의 가장 밑바닥에는 '식민지'라는 뜻이 숨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중적인 의미가 작동하여 탐라 사람들이 탐라를 제주라고 주체적으로 부르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교묘한 음모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의 주체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가 아니라 외부의 권력에 의하여 조종되는 페르조나일 뿐이다. 僞主體인 셈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명칭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앞치락뒤치락 했는가 하는 점을 새겨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國으로서의 '耽羅'는 1105년 '耽羅郡'으로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 강등되었다. 1295년 '耽羅郡'이라는 명칭은 '濟州牧'으로 바뀌었다. 고려에 복속된 후 190년간의 통치 기간이 지난 뒤에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의 사츠마가 1609년 유구국을 침공하여 경제적인 지배의 상태를 경험한 270년간이 지난 뒤인 1879년에 '沖繩縣'으로 명목상의 강등과 함께 '琉球'는 하나의 國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한 현으로 편입된 사실이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270년간 간섭 후 명칭변경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한 지역의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박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고 싶다. 정치적 실체로서의 國을 복속한 이후에도 주민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명칭은 선불리 변경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집안과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탐라고씨’라고 하던 본관이 ‘제주고씨’로 변경된 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耽羅’라는 명칭이 완전히 공식적인 타이틀의 지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기는 고려 충렬왕 시기인데, 충렬왕의 비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元世祖의 딸, 몽골 이름은 忽都魯揭里迷失)이며, 이 시기의 제주도는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뀌는 복잡한 과정을 겪다가 1367년(공민왕 16년)에 완전히 고려에 속하였다. 즉 원나라가 고려를 식민지로 지배한 시기에 제주도에 탐라총관부와 고려에 쌍성총관부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원나라의 통치기간 동안 제주도의 정치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상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탐라의 명칭과 관련된 시기들로서, 1295년은 715년 전의 일이고, 元이 멸망함으로써 탐라명칭의 원인소멸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1367년(공민왕 16년)에 제주로 고착되었다. 즉 만약에 지금 제주를 탐라로 개명을 하게 되면, 640여년 만에 탐라의 명칭이 부활하게 된다. 즉 탐라라는 단어의 부활이 6~7백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실인식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나의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韓’이란 명칭이 한국사상에서 부활한 것이 소멸 뒤 약 1700년이 경과된 후라는 점과 비교해볼 때, ‘耽羅’ 명칭의 회복에 관한 논의는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교 관점은 논의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도 하다. ‘三韓’의 ‘韓’이 역사상에서 사라진 시기가 3~4세기경이라고 추정할 때, ‘耽羅’가 사라진 것과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국제적 간섭의 위기에 봉착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주

변의 간섭이 각축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으로 명칭변경을 시도하였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韓'이란 단어가 부활하는 것은 1700년 이상 사장되었던 개념의 부활인 셈이다. 최대로 늦게까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원후 300년에는 '韓'이라는 국호나 지명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897년 등장한 대한제국이란 국호의 '韓'의 배경에 대한 기록은 “我邦乃三韓之地而國初受命統合爲一 今定有天下之號曰大韓未爲不可”(고종실록 제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과 “及高麗時吞並馬韓辰韓弁韓 是謂統合三韓 … 定有天下之號曰大韓”(고종실록 제36권 고종 34년 10월 13일)이다. 정체성의 본질에 도전하고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1700년 이상 사장되었던 '韓'이란 용어를 복권시켰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진정한 자치는 개념의 탈식민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탐라 고유명의 부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나는 '自治道'라는 것의 배경이 植民知(colonial knowledge)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自治植民地'란 영국식의 間接統治(indirect rule)를 적용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자치식민지의 구상을 제시한 일본의 지식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伊藤博文, 福田德三, 泉 哲 등). 그들은 정략가들이자 지식인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伊藤 統監의 피살로 일본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강경파의 주장은 조선에 대하여 직접적인 武裝統治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때 자치의 아이디어는 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自治植民地'라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모순 덩어리의 소산이다. 지금 '耽羅'에는 '自治植民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濟州特別自治道’로 만족해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현상이 자못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란 ‘자치식민지’라는 용어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담지 못하고 있는 ‘特別’이란 용어만 제외하면, 양자는 의미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耽羅道’라는 명칭에는 ‘特別’과 ‘自治’의 의미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의 사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標準語’라는 것은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 발음이 퇴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의 음가를 ‘야’의 음가로 전환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발음이라는 것은 구강구조(몸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逆으로, 발음이라는 것은 구강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발음이 변질된다는 현상은 기억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발음의 퇴화는 몸의 기억을 퇴화시키는 셈이 된다. Michel Foucault가 제기하였던 ‘생력’(biopower)과 관련된 문제이다.

아무르강 유역과 흥안령 산중에 거주하던 사람들인 ‘으르첸’을 연구하였던 일본의 인류학자들과 민족학자들이 그 발음을 따라할 수가 없었다. 일본어에는 그러한 발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르첸’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으르첸’에 근사한 발음으로 자신들이 가능한 구강구조를 동원하여 발음한 것을 ‘오로촌’이라고 적었다. 사실상 제주도에서 현존하는 ‘.’의 음가는 북만주의 ‘으르첸’ 거주지역과 파푸아의 비약섬에 살아 있다는 점을 수년전에 양쪽의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나는 그 ‘.’音價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문화주권과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때, '즈, 츠, 쓰' 등의 발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조선인들이 그 발음의 불가함으로 표적이 되어서 타살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결국 조선인 집단학살의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되었다. 결국 음가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스와힐리어가 일종의 링구아프랑카이다. 그 속에 분산되어 있는 부족들의 언어들도 서로 다르다. 스와힐리어가 여러 부족들간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스와힐리어의 언어만으로는 부족들간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부족간의 영역분쟁에서는 언어가 아니라 춤 동작으로 부족을 구분한다. 춤 동작을 보고, 영역을 침범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영역침범의 사례로 발각이 되면, 타살의 대상이 된다. 발음으로 구분이 되지 않으니, 춤으로 즉, 몸동작으로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다. 발음의 문제는 몸동작과 같은 것으로서 몸의 기억인 셈이다.

제주도의 문화주권과 정체성에 관련하여 제기하고 싶은 또 하나의 단어는 '해녀'라는 단어다. 제주도는 섬이다. 제주도를 생각하면서 바다와 바다에 관련된 삶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변지수가 잘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어인 '해녀'에 대해서 문화주권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사실상, 1968년에 제주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잠수'로 통일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최근에 제주도청에서 제작한 공문 및 기구의 이름에 '해녀'라고 등장하고 있다. 모든 순서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현상이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 저술한 문집 『北軒集』 중에서 '초년록(初年錄)'과 '수해록(囚海錄)'은 제주의 유배 기간 동안에 쓴 시문

이며, 이밖에도 ‘취산록(鷲山錄)’과 ‘은귀록(恩歸錄)’에도 제주도 유배 기간 중에 쓴 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김춘택은 늘 당쟁의 와중에 있었다. 1701년 탄핵을 받아 전라북도 부안으로 유배되었다가, 1706년(숙종 32년) 제주도로 이배되어 이후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적거 생활을 하였고, 제주동천적사기(濟州東泉謫舍記)도 남겼다. 그는 유배기간 동안에 제주도의 삶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춘택이 작성한 ‘潛女說’이란 제목의 시편이 주목을 끈다. ‘潛女’라고 한자를 사용하여 제주 ‘바당’에서 ‘물질’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에 관한 시편을 남겼다. 조선조의 유학자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시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보아야할 문제이다.

시 속의 ‘潛女’라는 글자는 김춘택이 당사자들이 단어인 ‘즘네’를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 그 지방에 거주하는 식자들이 ‘즘네’를 한자화한 것을 김춘택이 옮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도 김녕과 우도나 종달리에 가면 ‘즘네’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물질하는 여인네’들을 ‘즘네’나 ‘潛女’로 지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후일 식민지경험을 통해서 주입된 단어인 ‘海女’라는 육지식 또는 일본식 단어를 ‘즘네’나 ‘潛女’에 적용하는 것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이 섬에 살아온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과정은 후일 역사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가 ‘海女’라고 적은 기록이 있다. 그것은 전라남도 해안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전경수, 2010). 그것을 근거로 하여 고문헌에서도 ‘海女’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근거자료를 갖다 댄다는 것은 제

주의 현상을 '후랑켄슈타인'化함으로서 제주의 문화주권을 포기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주'라는 사람을 구성하는데, 오른쪽 팔은 인도네시아에서 갖고 오고, 왼쪽 다리는 시베리아에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드시 탈맥락화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다. 제주의 사실은 가능한 한 제주의 인식에 적합한 적용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주의 현상을 육지의 현상에 기반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개념화의 과정에 개입된 주체박탈의 현상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문화주권이 사라지는 첫 번째 단계가 탈맥락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청이 관계되어 있는 '해녀박물관'이라는 것은 잘못 작명이 되어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海女'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 단어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왜 남의 말을 가져다가 제주의 것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반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분란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또는 제주와 일본의 유사한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 등재를 하지는 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엉뚱한 절차가 마련될 수도 있다. 억지 주장이나 고집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일에는 반드시 수순이 있고 절차가 있다. 수순과 절차에 입각해서 시도를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일에 성공적인 결과가 생산되리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그 과정에 혈세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탐라의 '증수'와 육지 또는 일본의 '해녀'를 비교하는 작업은 가능하지만, 그 도를 넘어서 육지식 또는 일본식의 단어를 적용하여 탐

라의 현상을 대체하지는 것은 “날라 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배 양보하여, 언어현상의 변화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潛女’가 ‘海女’로 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潛女’ 또는 ‘잠네’라는 단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시퍼렇게 살아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현재 진행형인 언어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직 ‘海女’가 ‘潛女’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언어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만약에 제주자치도에서 공문 형식을 취한다든지 ‘해녀박물관’이란 간판의 제목을 근거로 해서 ‘海女’라는 단어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관제언어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고, 그 역풍은 반드시 불게 마련이다. 문화주권의 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을 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와 언어의 문제들을 모두 고려한 지명과 현상에 대한 명명을 생각한 결과, 나는 일각에서 ‘濟州海女’라고 쓰고 읽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은 일종의 重層的 植民知의 한 사례라고 단정하고, 그것은 극복되어야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復權概念으로서의 ‘耽羅잠수’라는 용어를 제안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미 본고의 전반부에서 논의한 바 있는 ‘耽羅’라는 지명의 문화주권과 정체성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한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탐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바다와 관련된 생활방식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종달리나 세화리나 김녕에 가면 ‘상잠수, 하잠수’ 등의 용어들이 내부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용어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內觀的(emic) 입장을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耽羅語의 음가를 살려서 즉, ‘·’를 표기하여 ‘잠수’라고 기록한다면, 그야말로 문화적인 의미의 맥락화가 가일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IV. 海軍基地와 濟州特別自治道: 관찰과 사실인식(2)

등터진 새우 신세의 역사에 관련된 농담 한 마디로 다음의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농담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도를 지나친 것이긴 하지만, 본고의 논리전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만약에, 그야말로 만약에, 중국 대륙의 漢族 13억 명중에서 1억 5천만 명이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에 의하여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를 향하여 걸어내려 와서 한족 두 명이 북조선인과 남한인들을 한사람씩 골라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끝도 없이 걸어 가버리면, 이 땅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씨가 마른다. 그러나 중국 대륙 한족의 분포지도에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별로 커다란 변동 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過弄非弄인가.

1840년과 1860년 두 번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중국(청나라)의 붕괴, 뼈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난 현대중국이 그 아픈 상흔의 과정을 잊겠는가? 2040년이 되면 즉, 앞으로 28년이 지나면, 아편전쟁의 발발한지 200년이 된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사실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편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그 후 중국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밀한 사실 집적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반면교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라는 거울밖에 없다.

역사라는 거울을 대하고 자신을 성찰한 중국은 아편전쟁의 가해자인 서양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그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의 '사실인식'이다. 이 부분은 사실인식에 기초한 예측이다. 관찰과 예측의 결합으로 삶의 미래에 위한 합리적 구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구도와 구도가 요구하게 된 체계의 과정에서 한국

은? 제주도는?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과 예측을 번갈아서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중국이 경험하였던 역사로부터 발신된 축이다. 동아시아에 살아가면서 중국과 해양과 육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 이 축은 무시할 수가 없다. 地政學의 문제다. 일본으로부터 발신된 축은 오키나와의 역사적 경험이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발신된 축이 가세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항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는가? 거문도사건과 울릉도사건은 왜 일어났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세 방향으로부터 발신된 축들의 경합 상태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 속에서 제주도의 역할은? 이라는 구도가 우리의 논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러시아로부터 발신되는 축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 축은 적절한 타이밍에 지렛대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방안이 된다.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의 집권 이후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다. 중국의 대양해군 건설은 해상 수송로 확보와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5년 이후 과학기지의 일부가 건설되어 있는 '소코트라'(이어도)에 대한 감시활동과 자국 영토 주장을 강화하는 등 영유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서남해의 원유 및 가스매장량에 대한 일각의 추정은 70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 남쪽 해역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해상수송로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안보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는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가 대양해군 건설의 초석이 되고 제주도민에

제도 안보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정마을만이 아니다. 천혜의 항만이 가능한 화순 해역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필연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앞에서 관찰된 사실을 기초로 한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해군은 당초 조감도에서 보여준 대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친환경적 '명품' 군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제주도민을 향하여 천명해야 하며, 그 약속은 도지사의 감독하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로 보완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이 해양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고, 중국이 인식하는 해양위협을 제거하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관련된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것을 島連線(Island Chains, 섬을 연결한 방어선) 전략이라고 이른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다오위다오-타이완-필리핀-스프래틀리군도로 연결되는 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2050년까지는 제2도련선(괌-북마리아나군도-호주로 이어지는 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설정하였다는 보고를 읽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는 도련선 전략의 추진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임이 틀림없다. 2020년까지 중국은 3만~4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 2척과 6만 톤급 핵추진 항모등 4~6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동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나 군사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바둑을 두게 되면,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이고, 상대가 한 수를 두면, 다음 차례에

상대의 수에 대한 대항수를 두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다는 점을 역사적 경험으로 증언하고 있다.

『耽羅巡歷圖』의 기본적인고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군사기지라는 점이다. 목사가 임금에게 “변방의 군사기지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정비되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화려한 보고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페이지마다 군사적인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背慰’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 그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도가 과거에 군사기지였음을 외면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제주도가 현재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인식에 문제가 있다. 사실왜곡과 문제가 있는 사실인식을 전제로 한 ‘평화의 섬, 제주도’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표현이다. 나도 평화를 내 삶의 대전제로 삼고 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군사기지의 확보라는 점은 나의 신념이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신념이다. 나의 신념은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의 예측은 사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민간단체들이 과연 전시작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일개 소대라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민간단체들에게 있는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의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낭만적인 관점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군축’이라는 단어 하나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동아시아 역내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간과할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는 ‘永世中立國’의 보장도 전혀 없는 한반도, 중국이 군사적 팽창을 확산하고 있으며, 남북이 군사적 충돌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

면, 군사와 외교에 관한 최고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반대의견도 중자들 중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헤게모니라는 구도 속에서는, 팽창은 반드시 역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도 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대의 고도로 기계화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 전력을 제외한 해상 작전만으로는 군사행동의 제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해군기지가 공중 전투력을 확보하든지, 공군이 해군과의 긴밀한 작전수행을 위한 군사비행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해군기지와 긴밀하게 연결된 비행장으로서 '울뜨르비행장'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는 적극적인 참여의 좌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 제39호로 지정된 울뜨르비행장은 제국일본의 군부에 의해서 1926년부터 1936년까지 10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후 1937년 중일전쟁 때 처음 사용됐다. 남북방향으로 길게 들어선 활주로는 길이 1400m, 폭 70m 규모로 잔디를 깔았다. 이후 나가사키현의 오무라 항공기지가 이곳에 주둔해 중국 난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륙 공격을 위한 해양폭격거점으로 활용됐다. 당시 이곳에서 출발한 일본군 전투기의 난징 공습은 36회였고, 연 600기의 전투기가 총 300톤의 폭탄을 쏟아 부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비행장 건설에는 제주도 사람은 물론 육지에서까지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다. 폭 20m, 높이 4m, 길이 10.5m 규모의 격납고는 총 20개가 건설되었다. 당시 '아카토펙보'(빨간잠자리)라고 불렸던 전투기는 은닉하였던 시설이다. 이 중 19개는 현재까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 격납고 인근 활주로와 지하병커, 방공호, 셋알오름 고사포진지,

고사기관총진지, 송악산 해안 자살특공대정진지 등도 옛 모습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공군기지로서의 올뜨르 비행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올뜨르비행장의 공군기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제주도에 새로운 군항이 들어서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약들에 의해서 신항은 미군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군항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기항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동아시아의 군사구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주권은 어떠한 모양새로 지켜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강정의 해군기지와 올뜨르 비행장의 군사기지화에 발맞추어서 제주도는 도민주체의 대응방식을 고안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주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하나는 군사기지의 건설과 관련시설의 도입이라는 과정에 즈음하여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주체적이고도 적극적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의 실천과정에 제주도민의 참가를 보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적 지위를 부여 받은 만큼 그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계획과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배제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군부는 적극적으로 주민

과 도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할 의무의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사기지가 건설된 이후에는 그 관리 과정에서도 주민과 도측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군사기지의 책임자가 인사이동에 의하여 부임과 전출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에게 신고식을 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내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이동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상황실에 日報식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군사기지의 경우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수한 군사장비, 예를 들면 핵장치의 물적 자원이 제주도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락이 필요한 법적 장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도내에 주둔하게 되는 군사기지내의 인력과 물자는 제주도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인구이동과 물자이동의 차원에서 군사기지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오키나와의 경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지역협력관(community relations specialist) 같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본의 '소파(SOFA)'는 한국의 '소파'와 어떻게 다른지? 유럽의 '소파'와 일본의 '소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배경으로 대비를 하는 작업과정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처해주는 사람은 없다. 모두 스스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군항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극적으로 관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과 로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제주도의 지형변경이 발생하는 군항 건설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입을 다문다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해군이 언급한 '명품' 군항의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지사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예컨대, 군항을 건설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제주도의 천혜 자원인 해양환경의 훼손 문제이다.

군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멘트가 투입될 것이 뻔한데, 시멘트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주심의 환경훼손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군항의 건설과정에서부터 시멘트는 부식과 용해의 과정이 시작되어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 명확하다. 시멘트의 부식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제주도에 건설되는 모든 군사기지의 시멘트는 특수한 제조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군항건설에 투입되는 구조물에는 반영구적인 유황고화체(硫黃固化體)의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관철시킴으로서 군항 건설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4·3사건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제주도라는 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해서 필요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의 지위보장이 확인되는 단계까지는 군사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그것이 '뾰'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악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인 것은 역사적 경험들이 증언하기에 충분하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경을 면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국경을 면하고 있는 해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특히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270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국가를 유지해왔던 유구왕국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스위스의 영세중립국 확보과정의 지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해군기지를 비롯한 각종 군사기지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은 협상력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수적이며, 협상과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반대 목소리는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는 내부갈등의 원동력으로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내부갈등의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반대 목소리만으로 자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부재를 증명하는 꼴이 된다. 팽창은 역풍을 부른다는 헤게모니의 구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V. 결어: 위기와 기회의 예측

나는 사상적 자유가 전제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이 우리 세대가 천착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한다.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된 '사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19세기 이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배되고 속박되었던 상황이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수입된 것들을 '그라스대'(카더라)의 수준으로 이식해온 점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학문이 존재할

공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판을 목적으로 설정한 관찰과 예측이 준동하고, 그러한 과정을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횡행하는 것은 학문도 삶도 모두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소위 '가치중립'(value free)이라는 현상이 실현가능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과 사실인식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가서야 하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과 사실인식에 대해서 한 치라도 소홀할 수 없는 이유가 가치중립의 불가함에 있기 때문이며, 이념과 소신이 사실과 사실인식에 앞선다는 것은 학문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문제가 실현 불가능한 '가치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이다. '가치중립'이라는 현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느냐 하는 것이 학문의 과정이다. 그 과정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학문이라는 현상이 충실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집단의 이념과 개인의 소신이 가치중립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이라는 지고선을 향하는 노력을 최상으로 경주하는 것이 학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소신이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념과 소신은 학문 활동의 전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나는 사회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전개되고 있는 많은 '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기한다. 그것은 일종의 '위장취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운동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학문과 운동은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자가 협동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삶이라는 현상을 생각하면, 양자는 반드시 중국적으로는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지식인을 포함하여)을 그 과정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종이 모여 사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운동의 현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인 입장의 지고선은 자연스럽게 운동의 현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양자가 뒤섞여서 오리무중의 상황을 전개하는 식의 사회과학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주업(학문)과 부업(운동)의 수순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업이 주업의 지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이 위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 그것은 또한 진리에 대한 배신이 되는 셈이다.

地名과 고유명사의 체계모니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나는 '제주'라는 단어의 포기를 주장하고, 그 대신에 문화주권의 확보와 정체성 복원에 관련된 용어로서의 '耽羅'를 제안하였다. "나는 제주사람이요"라고 말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나는 식민지 사람이요"라는 사상이 정체성의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지나친 언급이 될까? '제주도지사'는 사실상 '식민지총독'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동시에 물질에 관련된 키워드인 '海女'가 내포하고 있는 植民知의 문제를 제기하여, 토속명에 바탕을 둔 '증수'로 대체할 것도 제안하였다. 植民知의 정체성으로 뿔뿔 뭉쳐진 두 가지 단어들, 즉 '濟州'와 '海女'가 결합된 '濟州海女'는 중층적 식민지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는 '탐라증수'라고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섬에 누적되어온 삶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는 문화주권과 정체성(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군사기지라는 현실 앞에서 더욱더 크게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제주도의 군항이 해군의 제안대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군항건설의 기본재료가 되는 물자의 종류부터 오염방지를 최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기회에 군항건설에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에 유황고화체(硫黃固化體)의 사용을 건의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군의 '명품 군항'이라는 말은 임기응변의 입발림이거나 거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로 들어나는 시점에서부터는 장기적으로 대대적인 주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섬이 위기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찰 과정과 사실인식을 통해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의 예측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인간사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가역적이다. 내가 여기서 위기의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선행 경험에 대한 사실인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상황 즉 양속지배의 오키나와 상황과 같은 위기의 현상이 이 섬에 엄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사기지의 상륙을 기회의 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선 이 섬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측은 가능하다. '위기의 예측과 기회의 예측' 어느 쪽일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가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라는 과정을 동원하여 기회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이 섬에 대한 그리고 이 섬에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기회의 예측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로에 선 이 섬의 장래를 생

각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화주권과 정체성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칭문제를 거론한 것임에 대한 충정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 김세균, 2011, 「들어가며」, 『학문간 경계를 넘어』, 김세균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8-18.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출판부.
- _____, 2010,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Abstract

Cultural Sovereignty 'Jeju Haenyo' and the Naval
Base: Observation and Expectation in Social Science

Chun, Kyung-Soo*

I like to believe that positivistic experimental science should be our target based on the freedom of thought in terms of doing social science.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its relatively long history under the endless domination and exploitation, the word 'society' seemed not to be able to express its own reality through the necessary keen observation and careful expectation. I believe that there is no room for us to talk about science with our voice if we would not have a chance of the concerned reflexivity to review the phenomena of the perennially imported science in the name of academism. Doing social science seems not to be focusing on critics at its final purpose. If anyone tries to do that, it jeopardizes everything related with life including science because of the supposedly weak position of observation and expectation for the science as the first-hand step.

I suggest that the word of 'Jeju' in terms of the language hegemony to search for toponymy should be deleted and, instead, like to revive the word of 'Tamna' by means of cultural sovereignty and identity of this island. I like also to ask for dropping the word of 'Haenyo'(sea-divers) and revitalize the word of 'Jamsoo' instead. The reason why I raise this issue is based on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onial knowledge long and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of domination and hegemony around this island. I do especially point at the expression of 'Jeju Haenyō' as a sort of the nested colonialism. 'Tamna Jamsō' should be replaced for it for the shake of the islanders' cultural sovereignty and identity.

There seems to be a mind-boggling and explosive feeling of unsafety and uncertainty based on ongoing debate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in this island. This situation could be either crisis or opportunity for the fate of this island. It is the time to use the keen observation and furthermore the careful expectation in terms of doing social science. Human issue seems to be naturally negentropic. The previous Okinawan case in the context of history can be employed for our lessons for examining the whole process of the crisis and opportunity for the future of this island. It provides us for a role of the mirror for experimentation for the necessary expectation.

Key Words: Social Science, Identity, Cultural Sovereignty, Naval Base, 'Tamna Jamsō', Nested Colonialism

교신: 전경수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E-mail: korancks@snu.ac.kr)

논문투고일 2012. 1. 10.

수정완료일 2012. 8. 6.

게재확정일 2012. 8. 17.